

<더미래연구소>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이문현답(異問賢答) - '한국 경제의 정의로운 성장'

<더미래연구소> 최병모 이사장 인사말

오늘 저명하신 장하성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경제의 정의로운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문현답, 오늘 강연을 계획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장하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국 경제라는 것은, 97년에 IMF 사태를 겪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쉬지 않고 성장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오늘의 장하성 교수님의 강연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 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과연 정의로운 성장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고, 청년실업, 그밖에 노인부양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산적해가지고, 계속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될텐데,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마저도 국민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 경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참여해주시는 장하성 교수님께서 그 해법을 말씀해주시지 않을까 제가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기탄없이 이야기 하시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좋은미래 책임 운영 간사 박흥근 의원 인사말

예,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하성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 안팎에 어수선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불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공부와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가 두 번째, 장하성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이문현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보가 경제나 성장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고, 오로지 문제제기만 하는 집단인양 비춰진 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장하성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제기하시는 함께 갈 수 있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과연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이 소득 불평등, 소득 분배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모순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편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같이 고민을 나눠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행사를 주관해주신 우리 최병모 이사님께 감사말씀 전하겠습니다.

장하성 교수 강연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최병모 이사장님 그리고 더좋은미래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틀 전에 문재인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크게는 다르지 않고. 이것을 두 번을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가게나 소비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것이냐, 또는 생산 측면에서 볼 것이냐, 소비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 측면에서 볼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의 단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란 무엇이나, Justice란 무엇이나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게 철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이죠. 그런데 정의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최근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마이클 샌델 교수까지, 이 정의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무엇에 관점을 맞추는, 포커스를 맞추는 이야기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정의의 문제는 항상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각자의 응분의 몫을 주는 것, 그때 그것이든 돈이든, 명예든 각자의 메리트에 따라서 분배해주는 것을 정의라고 이 윤리학이 이야기 합니다. 이 시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자주 인용이 됩니다.

또, 근대 정의론의 가장 큰 성과를 이룬 학자라고 하면 존 롤스예요. 제가 제 책에 한국 경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기준을 그 롤스의 정의론(으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롤스의 정의론이 거의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재미있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때 대표를 맡고, 요즘 갑자기 다시 뜨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이 사실 한국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공부한 거의 원조에 가깝습니다. 서울대학 철학과에 계신 황경식 교수. 롤스의 정의론은 거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대 경제학의 원조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원조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아담 스미스를 생각하시는데요. 아담스미스가 여러분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지만,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묘비명에 『도덕감정론』의 저자라고 써달라고 할 정도로, 『국부론』과 쌍벽을 이룬 또다른 아담 스미스의 또다른 저작이 『도덕감정론』입니다. 원래 아담스미스는 철학과 교수였어요. 이 『도덕감정론』에도 정의론이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 스미스도, 정의의 첫 번째 개념은 교환적 정의고 두 번째 개념은 분배적 정의라, Distributive justice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런 어떤 철학적, 정치경제학적 배경 하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서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달에 책을 냈는데, 정말 재미없는 제목(※『한국 자본주의』)입니다. 아니, 책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재미가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주변에서도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팔린다. 또, 제가 이 책을 3년 여 집필하다 보니까, 원고 한 5000매를.. 출판사에서 이런 천 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약 칠백 여 페이지로 줄였는데, 제가 끝까지 이 두 단어의 제목을, 책이 안 팔려도 좋으니 하고 고집을 한 이유는 이 두 단어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거는, 한국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방점을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선생께서 백 년 전에, 북경에 망명중일 때, 동아일보 신년 칼럼에 조선을 위한 주인은 없고, 주인을 위한 조선만 있더라.

조선을 위한 공자는 없고, 공자를 위한 조선만 있더라. 조선을 위한 예술은 없고, 예술을 위한 조선만 있더라, 이렇게 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현재 시점에 정치권이든, 경제든 심지어는 문화계까지도 이념적 좌표로 양분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대립적 갈등, 이것이 많은 경제·사회문제 갈등을 만들죠.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의 방점을 둔 경제문제,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깐 상식적인 언급을 하면,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사유재산의 허용과 보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재산이라도 다 보호되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재산은 정의롭게, 정당하게 취득된 사유재산만 보호 돼야 합니다. 우리가 또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은 뭐냐, 경쟁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내는 것. 그런데 이 경쟁이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일 경우에만 그러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완전한 시장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완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인데, 현실에서는 완전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론자들이 어설피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럼 시장이 안하면, 정부가 하면 항상 효율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볼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매우 오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 1948년 제헌헌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유럽이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경제체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 전쟁 이후 한국경제가 뭐 체제를 논의할만한 수준이 못 되었고, 원조경제에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 된 것은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개헌을 할 때, 1962년 헌법 개정 때,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 시장경제를 표방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이, 62년부터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계획경제로 했는데,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운영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하겠다고 당시의 박정희 정부가 선언을 해놓고, 실제 현실로 경제운영은 군사독재의 공산주의 계획경제방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1921년 구소련의 초대 수상인 레닌이 시작한 거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계획경제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했지만, 북한은 1958년에 경제개발 1차 계획을 했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실은 그것을 사실은 그것은 이승만 정부가 본뜬 겁니다. 그러나 4/19 혁명이 나서 실행이 안 되었고, 다시 장면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각이 통과한지 한 달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서 또 포기하고, 그거를 박정희 정부가 이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우리나라는 계획경제를 포기했냐, 199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를 시작한 건 1995년입니다. 그런 계획경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목욕탕 요금, 다방 커피 값, 이발 값, 설탕 값, 라면 값을 다 결정하던 게 199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가장 당시에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요구에 하나인 목욕탕 요금이 자율화 된 게 199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율화를 해놓고 목욕탕 주인이 목욕탕 가격을 올리면, 세무사하고 구청의 위생과

가 나와서 단속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시 내리게 한 것이 1995년까지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역사는 20년밖에 되지를 았다는 이러한 간단한, 큰 변화를 전제를 해서, 오늘날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이 어떠냐를 보겠습니다. 자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든 관점을 보통 국민들의 살림수준에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계의 문제에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업 측면도 아니고, 기업 측면도 아니고.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25년간의 변화를 보면요. 가계소득의 변화구조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노동소득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난해에 특히 21세기 자본이 한국에 열풍을 가져온 것은 불평등이라는 것을 새롭게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불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불평등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각광을 받은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피케티 교수는 재산 불평등 즉, 자본주의 250년 역사에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미국과 유럽의 재산 불평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래서 자본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소득은 지난 20년간 늘지를 았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노동의 문제이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평균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소득 상위 10%안에 드는 계층도, 아직은 재산소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동소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것이 한국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최하위는 왜 노동소득의 비중이 적으냐, 이는 정부의 보조금이랄지 연금이랄지 이런 이전소득이 일정하고 갖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적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소득계층이든 관계없이 90% 이상이 노동소득에 의해서 살림이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피케티 교수의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참으로 반가웠는데, 엉뚱하게도, 특히 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 진보 좌파가 자본세, 재산불평등에 모든 방점을 두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책만 팔고 끝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거는, 앞에 거는 도시근로자를 한 이유는, 이 도시 근로자만이 1960년대부터 자료가 존재하고. 최근 이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하는 2012년부터 조사를 해서, 보다 많은 샘플을 가지고, 이만 가구를 가지고 통계청이 조사를 하는데 이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기 국회 때 최재성 의원실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때 최재성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배당 소득의 90%를 상위1%가 가져간다. 그러니 이 자본의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보고 제가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 저는 그 보도자료를 보고 좀 의아해했던 게 저는 부자들 사이의 불평등에 왜 관심을 두는지. 전체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소득으로 먹고 사는 거고. 지금 근로자가 1880만 명인데, 800만 이상이 소득세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분들 빼고도, 전체 소득 총액으로 봐도 노동소득이 한국의 불평등이나 소득구조를 결정하는 변수이지, 결코 재산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쉽게 보입니다. 좋은 차 타고, 큰 집사니까. 재산, 쉽게 보이지만 소득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것에 분노하고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이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결국은 노동 소득, 즉 임금의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양극화와 왜곡을 만들어낸 원인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인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결과인데요. 이 분이 결국은 자료를 과거까지 최대한 이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OECD 자료를 보면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불평등이 악화됩니다. 이 불평등을 저는 모든 걸 임금으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보통 지니계수를 가지고 보면 불평등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니계수 통계 내는 것과 그 정부통계를 OECD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가계동향조사라고 하는 통계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이 제외되어서, 실제 보다 낮게 평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표도 일반적으로 악화됩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걸 노동소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7-8년 동안 나빠졌다, 좋아지고, 좋아졌다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한국인데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불평등이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전후를 해서 악화되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반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미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다, American Dream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집을 소유하고 자녀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American Dream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이 30년 동안 악화된 수준을 불과 6-7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불평등이 심하고, 당연히 미국이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미국이 저임금 노동자 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산업공동화, 제조업이 줄어들어서 해외로 나가고, 그 자리를 저숙련 저임금 노동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이 주로 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전혀 한국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물론 서비스업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전혀 원인이 다릅니다. 그걸 한가지로 제가 언급을 하고요.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중위소득의 2/3미만을 받는, 이거는 최저생활비를 안 되는 노동자가 전체의 25%인데, 이때 지금 노동자가요, 비정규직 다 빼고 상용 노동자만 가지고 이 통계가 작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임시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때 이 임시고용은 OECD정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좁게 잡았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의 불평등만 악화 된 것이 아니라, 고용의 불평등이 역시 같이 진행이 된 거죠. 거기다가, 내가 내 직장 만들어서 먹고사는 자영업자 비율이 또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최근에 청년들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하고, 물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처럼 학교 다닐 필요도 없이 그것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수천 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한 일이고, 결국은 많은 창업이 실패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정부가 돈을 주는 걸 보면, '야 내가 직장 못 만들어주니까, 네가 네 직장 만들어.' 거의 그렇게 들리는.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제는 청년층의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꼭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래쪽은 정부 공식 통계구요. 위쪽은 노동사회연구원, 노동계 쪽의 통계인데. 아래는 이 노동연구원 통계. 우리가 2007년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90년대 중반이후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에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정부통계로도 불과 3% 줄었어요. 전혀 그 기간제 보호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라 했는데, 다 해고하지, 전환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두고 봐라. 사람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이게 무슨이 뭔가 면요, 일이 임시적이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자리는 임시직 비정규직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은 계속 지속 되는데, 사람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썩 임금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 중에, 오른 쪽 바뀌는 연봉 1억 짜리 노동자가 끼고, 왼쪽 바뀌는 연봉 3000만원 자리 노동자가 끼고. 이런 동일 노동에 대해서, 또 그것도 지속되는 동일 노동에 대해서 이 차별화 되어 있는 임금구조도, 고용 안정의 구조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은 실패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노동시간으로 보아도 절반수준입니다. 노동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으로 보아도 절반입니다.

그리고 청년세대의 36%가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비정규직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다음에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당연히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왔느냐, 직원을 인턴이라고 하면서 뽑아요. 미국애들 인턴이다, 외국애들 인턴이라고 그러면, 학생때, 방학때,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걸 인턴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인턴은 직원을 뽑았는데 한 자리에 두 명 세 명 뽑아 가지고, 그 중에 한 놈 남기고 다 내보겠다는 든지, 임시직을 뽑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정규직이 지금 36%인데, 그러면 2년 지나면, 이중에 얼마나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 거냐. 첫 번째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일단 일자리를 가졌고, 정규직으로 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2년 후에 전환이 안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갖게 되면요 거의 절망에 빠집니다. 제가 학교 살림을 한 6년 간 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2년 되면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대학 본부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거의 불가능 한..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주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전환을 해주었는데요. 그 전환해 준 직원들 중에 한 40명 중에 한 20명을 전환시켰는데, 한 명도 빠지 않고 평평 읍니다. 왜냐면, 대학 노조 굉장히 썩니다. 대학 내에서 계약직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노조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직원들 성추행 당해도 노조에서 외면합니다. 철저한 2등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인생을 우리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지느냐. OECD 평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보다 좁은 개념의 보다 넓은 개념의 비정규직 보다 좁은 개념인데, 1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10%입니다. 10명에 한 명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이 이야기 하는 2년을 훨씬 넘긴 3년이 되도, 열 명에 두 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의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한 40% 중소기업 60% 고용을 했었구요. 90년대 들어오면 그게 한 10대 4로 바뀌는데, 지금은 8:2입니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일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업이라고 함은 무슨 삼성전자 이런데처럼 3000명 수만명 고용하는 그런 대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00명 이상이 대기업이니까, 실제 일반 사

람의 개념으로는 대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격차가 있고, 대기업은 더 이상 고용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항시 중소기업은 임금이 대기업 비해서 적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성장하는 시기에, 80년대에는 90% 이상을 받았습시다. 임금 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도 75%이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입니다. 제조업은 그야말로 절반입니다. 전 이게 안타까운데, 제가 보여드린 모든 지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나빠지는 상황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방지했을까 우리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또 어떻게 보면, 왜 누구도 이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것은 한 번도 반전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80%는 나머지 20%의 절반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국민이 갈려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구조상으로 들어오면 또 달라집니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에 관한 자료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는 당연히 갖고 있죠. 그거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개혁연대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는데, 또 그 자료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조사한 단편적인 자료이긴 합니다만, 기사화 된 걸 보니까, 2차 벤더는 현대차의 36%, 3차 벤더는 25%인데요. 정확하게 이상하게도 60% 룰이 적용 됩니다. 1차 벤더는 현대차의 60%, 또 2차 벤더는 그거의 또 60% 3차 벤더는 60%인데. 1차 부품업체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다 대기업이라고 보면 되요. 그러면 100%와 60%를 받는 국민이 아까 고용구조로 본다면 20%고, 36%와 25%를 받는 노동자가 80%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청 원청 구조로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는 친재벌이다. 나는 친기업이다' 당당하게 정권 초기에 이야기 했다가, 정권 말기에 가서 동반성장하자, 두번째로 멀치는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극단적 보수 우파도 해보니,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뭐 지금 정부, 지금의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걸 우리가 OECD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는 알고 계신 통계인데, 이 표는 우리나라가 2012년 2163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일한 때가 과거 언제인가를 제가 역 추적해서 만든 그래프 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몇 개의 나라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자들은 38년 전 일본의 노동자만큼 일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선포했던 피케티 교수의 나라인 프랑스의 47년 전, 미국의 60년 전 노동자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이 늘지 않는다. 자꾸 산업구조로 문제를 보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의 노동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한자리에 두 사람이 앉습니까. 일자리 나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도한 노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 즉, 노동자 투입 대비 아웃풋을 계산하면 최하위급입니다. 왜, 사람이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세기 전의 유럽의 노동자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현실은 불평등하다. 80대 20의 사회다. 여러 개의 구조로 국민이 갈려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원청기업 하청기업으로 갈리고.

그래서 노동계를 끌고 가고 있는 대기업 노조,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면서 정규직, 연봉 1억이 넘습니다. 평균이. 나는 그런 노동자들이 노동계를 주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

습니다. 우리나라 노조가입률 9.8%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노동자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이면서, 하청기업입니다.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나.

저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념적 양분화 되어 있는 한국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계까지. 보수는 자기 기득권 지키기를 하고 진보는 이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야기 하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을 부정하는 반경쟁주의. 아까 우리가 국민 의례할 때,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 하면서 많은 불평등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의 자유를 반한, 반자유의적이고 반시장적인 것이 보수의 모습입니다. 진보는 뭐냐, 노동 없는 경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 없는 경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자본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체제 자체를 자꾸 부정하는 식으로 현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지금의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과거에 이루었던 걸 이야기하고, 진보는 한국 이야기를 별로 안합니다. 유럽,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놀랐었어요. 피케티 책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내 책은 관심이 없을까, 제목이 잘못됐나?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학계도 한국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을 분석한 논문은 세계적인 저널에 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에 한국경제를 공부한 분은 극히 적습니다. 서점 가보십시오.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 보다 나은 구조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안 하고 입만 열면, 유럽 이야기, 입만 열면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공동화 때문에, 노동이 어떻게 되었고, 임금이 어떻게 되었다.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마치 한국 이야기인 것처럼. 재벌과 노동이 대타협을 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럽에서 틀린 이야기지만, 한국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노동자들의 대표라고 대타협의 주체가 됩니까, 등등 이런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입만 열면, 규제타령인데. 제가 제 책에 전경련에 200대 개혁과제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제계 대표가 전경련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요, 200개 개혁 과제에 승마장에 초지를 조성하게 해 달라, 동물원에 총포를 소지하게 해 달라, 자동차 방향 지시등에 규제를 풀어달라, 이게 다 됩니까. 전경련 회원사 소원수리입니다. 진보는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원천적 분배가 잘못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를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저는 이제 원천적 분배 문제에 정부가, 정치권이 개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보는 수입품 가지고 멧을 내려고 하고, 보수는 박정희 형식처럼 흘러간 옛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자기 것을 지키는 틀 속에서만 대안을 모색하고, 진보는 자기 이념 틀 속에서만 대안 모색하는 이런 모순이 오늘의 현실을 지난 17-8년 동안 일방적으로 악화되도록 방치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항시 성장해 왔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외환위기 다음 해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항시 최상위 성장률입니다. 지금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성장률이 3번째, 4번째로 높습니다. 결코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5000불 10000불 국민소득일 때 성장률과 지금 27000불 넘을 때 성장률을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는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노동에 즉, 절대다수의 국민이 살림을 꾸리는 노동에 대한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일방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 총소득 이거는 GDP 국민 총생산을 소득의 개념으로 본 건데,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요. 그 줄어든 가계소득의 비중이 그대로 기업소득으로 이전해갔습니다. 경제의 3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성과가 일반 국민들의 삶을 낮게 하는 데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자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재분배, 재분배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왜?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까만, 정부가 재분배를 하려면, 세수, 즉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분배를 하지 않으면 정부세원은 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중산층이 줄고, 줄어든 중산층이 저소득층, 특히 그 중에 1/3은 고소득층 이 때 고소득층은 최근에, 소득세 환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위소득의 50% 이상, 그러니까 5500 만원 이상, 그러니까 실제 고소득층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소득층, 빈곤층이 가장 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90년대 까지는요. 국가경제성장률이나 파란색이 그겁니다. 빨간색은 기업소득 증가율이고, 초록색이 가계소득 증가율인데, 셋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더 많은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깨진 겁니다.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로 악화 되어 있느냐. 기업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에 못 따라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왜 재분배 하는 이 복지정책 이야기가 어려우냐, 정부의 세수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절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분배를 해야, 거기서 소득세도 나오고, 소비세도 나오고, 이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정부소득증가율이 급격하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만 봐도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적으로 1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실질적으로 3% 성장에 그쳤죠.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우리 보통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1인당 GDP올랐다 그러면, 아 나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나보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GDP도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경제수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가는 그런. 그 이유는 결국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풀지 않고 회사에 묶어 두고 있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 국민 총생산 중에서 투자비중은 늘 적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항시 일정했다가,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설비투자는 한 번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줄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러다보니까 어떤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일반 국민이 저축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 살림에서, 아껴가지고 저축해서 그 돈이 투자되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거죠. 국민들은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 전체 우리나라 총 저축 중에서 정부부문 기타부문을 빼고 가계와 기업 부문을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는 기업이 저축의 주체입니다. 이거는 넌센스 경제입니다, 사실. 왜냐면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저축률이 다 아시는 것처럼 3%대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가계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기업부채 시대였는데, 지금은 가계부채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국민들이 빚을 내서 먹고 살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보수는 이 옛날 구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고도성장했던 구조 가지고 계속 산업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 가지고 경제성장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보는 이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이념, 복지, 재분배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되는 거죠. 근본적인 분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없는 경제, 다시 말해, 민간 소비가 경제를 이끌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은 소비를 위한 것이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아담스미스의 말입니다. 소비 없는 경제는 없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일반 가계 살림의 소비 없는 경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소득이 없으니까.

또 하나 다른 문제 중 하나가, 전 이걸 꼭 기업의 문제가 또 별도로, 기업의 문제만 이야기 하면, 김상조 교수나 이런 분들이 뭐 몇 시간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짚어 낸다면, 지난해인가요. 국회에서 지주회사법을 개편했었죠. 이유는 SK하고 이 GS가 이 페트병, 물병 원료 만드는 외국사와 합작 공장 만들 테니, 1조 투자 하니까, 그거 하려는데, 손자회사로밖에 할 수가 없고, 지주회사 손자회사는 100% 지분 보유를 해야 한다니, 그걸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2013년 말에 이제. 의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1조 투자해 가지고는 몇 명 고용창출했는줄 아시죠? 1조 투자해서. 법까지 고쳐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 고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50명 고용했습니다. 50명. 년센스 게임이었습시다.

자,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죽은 단어입니다. 죽은 단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소중한 개념이고 단어인데, 지난 대선 때 남용 오용되는 바람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때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순환출자의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것은 괜찮고 앞으로 것만 안 된다, 기존 것이 이겁니다. 이게 72개 작년 4월 기준 계열사 소유구조인데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보다 더 복잡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소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왼쪽 아래를 보시면 신라호텔이 있습니다. 신라호텔 오너가 누구입니까. 이부진씨라고 알고 있어요. 이부진씨는 신라호텔 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국민이 신라호텔은 이부진 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 바꾸어야 합니다. 바꿀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바꾼 그룹도 LG처럼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국은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구조에는 미국의 산업을 이룬 카네기나, 벤더빌트나, 록펠러나 하는 사람들의 자식 손자 증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 창업자입니다.

자, 뭘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분배 없는 성장, 성장을 했는데, 분배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또 분배 없어서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소비 없는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한때 끊임없이 분배와 성장이 대립되는 개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신 많은 통계는 그 논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방적으로 악화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경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 없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정의론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 없는 정의로운 경제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재분배가 아닙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나 논쟁 이전에, 임금 분배의 구조를 바꾸는데 정치권이 손을 대야 된다. 정의로운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을 정의롭게 분배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했는데, 개인의 자유도, 이때의 자유는 1인 1표와 같은 절차적 자유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실질적 자유. 최장집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루었는지 모르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오히려 후퇴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한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정의로운 한국경제를 위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뭐냐.

우선 보수 우파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법률용어로 남의 것을 훔쳐간 걸 횡령이라고 그러합니다. 회사걸, 남이 훔쳐가도록 방치한 것을 배임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거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해서, 뭘, 회사재산을, 내가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당한 자본주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을 훔쳐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정당화 되는, 그리고 그러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 경제를 이어가는, 삼성의 이재용 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상장하고 어찌고저찌고 해서, 수조 원을 번 것은 거의 다가 회사재산을 도둑질해서 받은 겁니다. 그걸 어머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또는 시장경제에서 허용이 되어야 되는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한국 사회에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17-18년 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왜 삼성전자 재산을 이재용에게 넘겨주냐,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상장해서 돈 번 SDS BW 발행 무효소송, 검찰에 고발 재항고, 항고, 재항고, 또 다시 항고. 온갖 거를 했는데, 10년 만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 민사재판에서 문제없다. 이런 모순된 정의 구조를, 법적 정의의 구조가 한국 사회의 보수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영권, 재산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견희 회장과 그 일가는 삼성그룹 전체 주식의 2%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4.7%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회사에서, 불과 4%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세습한다? 경영권이라는 개념은 경영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습되는, 더군다나 공익재단을 통해서 세습을 하는, 이런 구조가 한국의 보수우파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경쟁이 1등이 영원한 1등인 경쟁은 경쟁이 아닙니다. 1등이 사실은 경쟁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 자리를 뺏길 수 있으니까. 2등이 꼴등이 경쟁을 좋아해야죠. 왜? 꼴찌에서 탈출하고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쟁은 새로운 도전자의 성공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러한 경쟁은 자기 스스로 손해입니다.

진보 좌파는 뭐냐. 정말 진보 좌파 쪽이 반성해야 될 거는 끊임없이 자본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자본 없는 경제, 대안 있습니까? 물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경제를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사회주의를 주장하시는 것이 정직합니다. 협동조합 공동체 경제로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대안이지, 경제체제를 대체할 대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경제를 어떻게 협동조합으로 합니까? 자본을 인정하고,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칼이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칼을 찌 사람이 베는 겁니다.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세상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대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싫어도 갈아탈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상적 사회주의는 살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본론이 쓰이고, 사회주의가 태동

하던 150년 전, 극소수의 자본가와 절대다수의 빈곤한 노동자가 대립하는, 노동 대 자본의 논리로 한국사회를 더 이상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현대차, 삼성전자 전국 평균 노동자 평균임금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소버린이라고 하는, 아니 룬스타라고 하는 맥튀 투기꾼이, 경영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렇게 알려진 외환은행, 우리 민족의 자본은 우리가 지켜야한다고 난리쳤지만 외환은행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제 계산으로는 1억 2천이 넘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고, 고용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2500만원인데, 돈 빌려주는 은행이 왜 1억 2천을 받아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동 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는 대안 없이 뭐만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 '신자유주의'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자든 보통사람이든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진지한 경제학자들도, 신자유주의가 뭘니까 토론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해맵니다. 실체도 분명치 않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그냥 쉽게 이야기 하고, 신자유주의만 안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진보 좌파가 더 나은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보다 현실에 뿌리박은 대안모색에 좀 진지했으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참 가슴을 파고드는 글이 있어서 항시 그걸 어디가나 소개하는데.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프니까 어찌라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쓴 책이라 읽었더니, 야,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말이 전 가장 가슴에 뚫고 왔어요. '다 바늘구멍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보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너 자신의 세상을 만들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패배에 져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세상이 겁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면, 아예 이렇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 했다.'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절망의 세상을 만들어준 거죠. 희망을 만들 수 있냐, 저는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세상은 스스로 바꾸지 않는다. 진화하는 세상은 미래가 없다. 환경에 생존을 위해서 적응할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야죠. 그 목적이 오랫동안 상실된 것 같아요.

누가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거냐. 저는 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이 저는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분배문제에 바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상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일부 보수 우파는 시장경제는 무조건 내버려 뒀다 된다는 정말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과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정치적인 실천의지와 그것을 해낼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 정치권 전체 구도가 정치적 실천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부터가 당선되려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외치고, 실체는 당선된 날, 12월 18일날 저녁에, 광화문 네거리에 나와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된 다음에, 경제 민주화는 없어져버렸어요. 젊은 애들한테 중동이나 가라는 소리 하고. 여당, 대선 때 김무성 대표 길거리 나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되고 다니니까 다들 다른 길 가고 있어요. 민주당,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안에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 보태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제는 정치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경험을. 아까 제가 서두에 미국이 American Dream이 깨졌다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100년의 불평등의 역사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던 그래프를 겹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이 한국이고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턱 밑에 와 있는데. 미국이 과거에 불평등하지 않았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평등한 사회였고, 저때를 American Dream의 시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갑자기 1940년대 초에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그 이전에, 1929년 대공황 전후에 미국은 지극히 불평등한 사회였고 194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불평등이 줄어들고, 그것이 35년 이상 지속 되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로 한 25년 30년 걸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가지고 지금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보다도 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 미국을 한국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된 거냐.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금 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순식간에 3-4년 만에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었고, 누구도 저 American Dream이 있던 30-40년 동안 미국이 경쟁력이 없었다고, 미국이 약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번영을 누리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 깨진 계기가 뭐냐, Second generation problem. 북부도 보면 처음에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입을 하는데, 다음 세대로 되면, 당연한 권리로 알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고임금 노동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임금 노동계가, 저 못 사는 사람들 게으르고, 일 안하고 하는데, 내가 세금내서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나, 그래가지고 보수화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그 당시 최고의 평균임금을 가졌던 항공 관제사 조합, 페트코(*PATCO, 미국 항공관제사노조)라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1980년 미 대통령 선거에 페트코가 유일하게 레이건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꼴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봉 1억 넘는 노동자들이 일반 다른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노동계를 끌고 가고 있고, 진보좌파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동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중소기업 평균 2000-3000만원 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레이건이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페트코에서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 당선시켰으니, 노동조건개선 더 개선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나 고임금 노조가 파업한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항공관제사는 연방정부의 관할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주었는데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페트콘 노조, 파업노조를 전원 해고했습니다. 전원. 그래서 미국의 항공관제사는 전부 군대를 투입해서 버텼습니다. 1년 반 이상. 그 이후로 미국의 노동조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철강노조도 문을 닫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지지 안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레이건, 부시로 이어지면서 저 꼴이 난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기간이 있죠. 90년대 전후.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미국 경제학회나 정치경제학회에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정책으로, 정치로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 같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없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만들어줄거나, 참 안타깝게도 기성세대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꿀 이유도 없고요. 저나 최병모 변호사님은 앞으로 기대할 것도 별로 없는데, 세상 바꾸어 봐야 귀찮기만 하죠.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여러 가지 통

계가 최 변호사님과 저에게는 하나의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님이나 저의 자식한테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혹한. 그런데, 10년 전에 우석훈 박사가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석훈 박사가 10년 전에 지금의 30대를 뭐라고 불렀다면, 88만원 세대라고 했어요.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과거의 88만원의 세대가 이제는 삼포세대가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희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20대는 스스로를 잉여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잉여라는 게 자본론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쓸모없는 나머지가 된 거죠.

누구책임이나,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이 40대에 있다, 40대와 50대 초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386세대를 위한 겁니다. 지금의 486 또는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이른 나이 때 세상의 중심에 정치 경제 언론계에 그 세대가 진입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기득권화 되고 오히려 세상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지, 그거를 반전시키는데, 어떠한 시대정신도 세우지 못한, 민주화의 공만을 내세웠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세대정신을 파괴한, 만들어주기는커녕, 파괴한 세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T 업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100대 부자의 거의 대부분이 IT 업계 부자입니다. IT 업계의 지금 신흥 100대 부자에 들어 있는 그 386, 지금의 486 세대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치계에 있는 486세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다음세대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냐,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0대는 스스로 포기했고, 20대는 진입하기 전부터 포기했는데, 가장 역동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있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지금의 40대 50대 초반, 486세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큼니다. 어쨌든 우리가 60대 70대들은 산업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정신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 시켰습니다. 50대 60대 초반은 사실은 산업화의 뒷마무리와 민주화의 시작 세대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공은 486이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시대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그러면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룬 이후로 지난 25년, 20년 동안 시대정신이 뭘 했는가, 세상의 변화의 중심축에 있는 가치가 뭐였느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헤매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평등의 시대를 추구할 때가 왔다. 민주화 이후의 그때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였다면,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의 쟁취는 보통 국민들의 삶에 보다 평등한 것에 있다. 그 평등화를 이루는 지름길은 저는 다시 한 번 정부와 정치권이 임금을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데 직접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용의 불평등 역시 개입해야 된다. 기업에 맡겨두거나, 시장에 맡겨둘 일만이 절대 아니다. 맡겨 두었더니 이 꼴이 난 거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성장은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리고 영똥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미래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보육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육의 문제를 복지론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